

조국혁신당에 손 건넨 민주당… 조국 “국민 뜻 따라 논의”

“추구하는 시대정신 다르지 않아”
청와대 “논의 잘 이뤄졌으면”
민주당 내부서는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격 합당 제안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고 밝혔다. 이어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을 하고 있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북 전주시 전북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합당 제안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정 대표 회견 이후 전북 전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마음,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

며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21일) 조 대표와 만나 합당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는 그동안 이 문제를 갖고 여러 차례 교감해 왔고, 어제 오후 (합당) 발표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게 됐다”며 “현재는 제안만 한 상태라,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다. 논의는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는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당·정·청 간 합의, 조율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지만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당부 관련된 일 아니겠나”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은 몰라도 공유 과정은 거쳤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도 이날 오후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청이 조율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에게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면서 “대통령께서 평소에 정당 간의 양당 통합에 대한 지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이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하니까 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 내에서는 찬반을 둘러싸고 당분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내 속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민주당 내에서는 찬반 논란을 불러왔다.

합당 반대 측은 정 대표가 당내 논의 없이 전격 제안한 점을 비판했고, 찬성 측은 “더 강한 진보로 나아가야 한다”, “목표가 같으면 함께 걸어야 한다” 등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도 찬성·반대 취지로 발언한 의원은 각 입장별로 2명, 총 4명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들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oul.co.kr

박근혜가 설득하자 장동혁 단식 멈췄다

박 전 대통령, 10년 만에 국회 찾아
장 대표 “더 길고 큰 싸움 위해 중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10년 만에 국회를 찾아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단식을 멈춰달라고 설득했다.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며 단식을 멈추고 건강 회복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훗날에 더 강한 투쟁을 위해 건강부터 챙기라고 조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지난 2016년 10월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이후 처음이다. 서명옥 국민의힘 단식투쟁단 의료지원단장도 박 전 대통령의

단식농성장 방문을 20여분 전에 공지받았을만큼 ‘깜짝 방문’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중도·보수 인사들이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와 마주 앉아 단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8일째 단식을 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며 많은 걱정을 했다”면서 “그러나,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많이 상해서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하

신 통일교 관련 특검과 공천 비리에 대한 특검을 정부·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고 비난할 수도 있겠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조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생각이 조금 더 다를 수 있겠지만,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한 목숨을 건 투쟁을 두고 국민들께선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훗날을 위해서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면 한다”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장 대표는 이후 단식농성장에서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장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손을 잡고 있다. /뉴시스

한다”고 의원들에게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당원동지들, 국민과 함께한 8일이였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응원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與 ‘보완수사권’ 두고 내부 격론

정책의총 열고 검찰개혁법안 토의
필요성 공감하지만 다른 방식 의견
협의 통해 하나의 법안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의 쟁점을 논의한 가운데,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회 당시 밝혔던 것처럼 검사에게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의견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주지 말자는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와 같은 취지로 의견을 말씀하셨

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다른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완수사 요구권이 라는 방법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생각보다 쟁점이 다양해서 충실하고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여당이기에 무한정 저희 의견만 병렬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수는 없고 종국적으로는 당정협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개혁안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에 기존 검사에 부여했던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인데, 강경과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피해자 구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주자며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회에서 “나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의)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라고도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며 “크게 보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박태홍 기자

여야, 이해훈 청문회 오늘 개최 합의

野, 날선 검증 예고

여야가 23일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후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다.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는 22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해훈 청문회, 내일(23일) 한다. 추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도 매우 부실하다. 제출시한인 어제 밤을 넘겨 오늘 아침에야 인쇄본이 도착했지만, 일단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검증부실을 낱알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어린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에 대한 갑질, 그리고 90억원대로 아파트 부정청약 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날선 검증

을 예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무엇을 (이후보자가) 잘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엔 (임명에) 절대 반대할 것”이라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개인의 역량을 평가할뿐 아니라 1일 1비리가 계속 나왔던 것에 대해 소상히 밝혀서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9일 예정됐었으나, 야당이 이 후보자의 넘쳐나는 의혹에도 국회로 제출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도 들어오지 못한 채 회의장 밖에서 기다려야 했고 나흘이 지나서야 청문회가 정식으로 열리게 됐다.

/박태홍 기자